



■ 법원, 제주4·3 수형생존인 형사보상 결정 / 보상신청 18인 기자회견

“70여년 맺힌 恨, 이제사 풀엄수다”

어제 보상 결정문 수령
“이런 날 오다니... 감격”
내달 중 손해배상 청구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이 국가가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 받았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문’을 손에 쥔 것이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70년 맺힌 恨, 이제사 풀엄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평국(90) 할머니를 비롯한 수형생존인 12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10일 별세한 현창웅 할아버지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은 가족이 대신 참석했다.

이날 재심 재판과 형사 보상 청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가 쓴 반성문 읽니다”라고 말하며 형사보상 결정문을 하나씩 수형생존인들에게 나눠줬다. 결정문을 받아 든 수형생존인들은 70여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감격에 겨워 했다.

김평국 할머니는 “이 종이조각이 뭐지 사람을 상당히 즐겁게 한다. 4·3 당시 맞았던 맺값을 70년 만에



제주 4·3 수형생존인 국가 형사보상 결정과 관련해 22일 보상을 제기한 18명이 제주지법에서 형사보상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받는 기분”이라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은 돈으로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약도 사고, 요양비로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근방(87) 할아버지는 “70년 묵은 한이 오늘에야 풀리는 것 같다”며 “이런 날을 만들어준 4·3도민연대와 변호사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제주4·3 당시 불법적인 고문과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인

에 대해 국가가 사죄·보상하는 것”이라며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수형생존인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아직 억울함을 풀지 못한 군사재판 피고인 2530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령이거나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재심 소송이 아닌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하루빨리 일괄적인 보상이 이

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4·3 당시 제주도민에게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묻은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향후 4·3 해결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또 다른 수형생존인 11명에 대한 재심을 조만간 청구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형사보상금 지급 환영”
4·3단체 등 잇따라 논평

제주4·3수형생존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수형생존인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이번 형사보상 결정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제주4·3의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제주 4·3연구소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정치권도 환영입장을 밝혔다.

송은범기자

정부 ‘4·3 희생자 배·보상’ 여부 주목

제주 국회의원들 “정부·국회차원 논의에 긍정 영향”

법원이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결정이 전체 4·3 희생자 배·보상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부와 국회에서의 4·3 배·보상 문제 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22일 “앞으로 4·3 배·보상 논의는 탄력을 더 받을 것”이라며 “상식선에서 봐도 수형인에게 이러한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유없이 총살당한 희생자들은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

학살 희생자들은 수형인과 같은 근거자료는 없지만 유추해서 생각해야 한다. 수형인은 희생자보다 배·보상이 아래 단계다”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된 분들은 전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결이다. 또 일반 4·3 희생자 분들도 그에 못지 않은 보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모든 4·3 희생자들이 개별 보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국가가 더 큰 부응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도 확인됐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하는게 맞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번 판결은 재판 기록이 있는 수형인에 대한 것이고 일반 4·3 희생자들의 경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이 다르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희생자 배·보상 논의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 의원은 “이번 배·보상은 구금 일수, 재판기록이 있었다. 일반 희생자들에게는 그런 형태로 배·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반 희생자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위로금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노인학대 요양병원 행정처분 면해

서귀포시 “2차 청문과 내부검토 거쳐 결정해”

속보=서귀포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지난 5월 발생한 입소노인 방임 학대(본보 7월 21일자 3면 보도)와 관련, 서귀포시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행정처분 없음’을 결정했다.

22일 시는 해당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방임 학대와 관련해 2차 청문과 내부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을 5시간 가까이 요양보호사의 돌봄없이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 학대’로 판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 입소자 방임 학대의 경

우 업무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방임 학대 행위가 업무정지 3개월을 내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타 시도에서 요양원에서의 방임 학대로 업무정지를 내린데 대해 요양원측이 업무정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청문에 앞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장 교체 처분을 통해 이달 8일 교체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학대 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요양원 대표와 해당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퇴역 경주마 학대 축협 관계자 3명 송치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적용
동영상 퍼지며 전국적 공분

제주에서 불거진 ‘퇴역 경주마 학대 논란’과 관련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축협과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한 경주마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 영상에는 경주마가 트럭에 실려 도축장으로 끌려간 뒤 작업자들에게 둔기로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도축

장 안에서는 먼저 도착한 말이 전기 충격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면 다른 말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페타 등은 제주축협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서부서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퇴역마가 도살 당하는 모습을 또 다른 말들이 지켜본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살되기 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판례나 전법적인 내용을 파악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공금 횡령 마을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마을 공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시 소재 A마을 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7년 3월 20일

A마을 해안가에서 오피스텔 영업을 하는 B업체로부터 경로잔치 및 마을 포제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2000만원 가운데 19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마을회가 건축주로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8평에게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을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그랜드보청기

여름시즌보청기 특별 할인행사!!!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참ชน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최대 60% 파격 할인

-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방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 고급 모델 1+1(원플러스 원 행사)
- 착용 보청기 A/S 및 무료청력검사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안내
- 청각장애인 보조금 상환선 131만원 안내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뽕진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시 서광로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